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785
----------	------

제출연월일 : 2024. 7.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하거나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근무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이 경우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후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이 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와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

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처장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⑤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 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년) ① · ② (생략)	제11조(정년)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 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하거나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u>
<u><신 설></u>	<u>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 공무원의 근무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이 경우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후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이 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와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u>
<u>③ (생략)</u>	<u>⑤ (현행 제3항과 같음)</u>

<신 설>

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⑤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0조(손실보상)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20조(손실보상)	제3호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 시점에서는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 발생 빈도나 구체적 액수를 추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재정부담액을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

III. 부대의견

- 해당 없음

IV. 작성자

- 연락처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02-800-5513)